

올바른 뉴스 언어, 표현, 문장

뉴스 객관성, 문장과 표현이 좌우... 감정 · 가치 편향 배제해야



이완수 / 동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뉴스 기사는 저널리즘의 현실을 스스로 말한다. 시민의 신뢰가 추락하는데도 기사의 품질이 제자리걸음하는 이면에는 잘못된 취재 보도 관행이 공고히 자리 잡고 있다. 시급히 바뀌어야 할 대표적 관행을 짚어보고 올바른 보도 원칙을 제시한다. 이 기획은 저널리즘 품질 향상을 고민하는 ‘좋은저널리즘연구회’ 회원들이 돌아가며 집필한다. 세 번째 글은 ‘올바른 뉴스 언어, 표현, 문장’에 관한 이야기다.

모든 뉴스는 문장과 표현에서 시작한다. 뉴스가 역사의 초고(草稿)라면, 기사의 초고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뉴스 가치, 취재원, 관점, 인용, 사실성, 미디어 윤리와 같은 저널리즘의 일반원칙 가운데 어떤 것도 뉴스 문장이나 표현을 앞설 수 없다. 뉴스 문장을 어떻게 다듬고, 표현할 것인가는 기사 작성의 일차적 조건이자 원칙이다. 뉴스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여부도 결국은 뉴스 언어의 표현이나 문장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아무리 좋은 뉴스라도 문장과 표현이 거칠고 올바르지 못하면 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 뉴스의 신뢰성을 의심받는 것은 물론이다. 《신문과방송》이 기획 연재물로 시작한 저널리즘의 ‘버려야 할 관행, 지켜야 할 원칙’의 세 번째 주제로 뉴스의 언어, 표현 그리고 문장을 잡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표현, 문장 틀리면 신뢰성에 의심

신문이나 방송 뉴스는 국어 문장인 동시에 기사 문장이다. 기사라는 글은 다른 글과 마찬가지로

언어(국어) 측면의 기준이 적용될 뿐 아니라, 저널리즘 측면에서도 엄격한 준칙이 함께 적용된다(이완수·박재영, 2013). 뉴스 문장은 어떤 글보다 더 까다롭고 철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뉴스 문장은 문법적으로 올바른 단어와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사실 정보에 기초하고, 사실 정보와 의견 정보를 구분해야 하며, 기자의 주관적인 표현을 가능한 배제해야 한다(이완수·박재영, 2011). 이런 과정과 절차를 잘 지켜야 올바른 기사 문장을 쓸 수 있으며, 저널리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받는다. 이 글은 한국 기자들이 뉴스 언어나 문장을 쓸 때 범하는 잘못은 무엇인지, 그 잘못을 어떻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단상(斷想)이다.

먼저 기사 문장을 쓸 때 저지르는 국어학적 오류다. 어휘 측면에서 일본식 한자어(예: 납득, 식량, 교수부지), 국적 불명의 외래어(예: 프랜차이즈, 콤비, 인플레이), 같은 의미의 어휘를 반복해 사용하는 동의어 중복(예: 깊은 심호흡, 깊은 숙고, 달리기 경주), 우리말에서 관형격 조사로만 쓰이는 ‘의’와

한 바른미래당 김철근 전 대변인은 “안철수 후보가 최대 피해자다. 김 지사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대선 댓글 조작을 기획하고 보고했는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야당의 이 같은 주장에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재판장인) 성장호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법부를 적폐 세력으로 몰고, 제1야당은 문 대통령 정통성을 문제 삼으면서 서로 뒤엎던 사법정당식 대치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지사 구속에 대처하기 위해 ‘사법농단 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며 재판부를 재차 비난했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31일 당 유튜브 채널 ‘썬’에서 “(사법부) 재판에 대해서도 행정부나 입법부가 문제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 삼권분립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헌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사법부 판

여교수에 150만 원 배상 판결

술자리에서 미혼인 후배 여교수에게 “시집 못 가 불쌍하다”는 내용의 모욕적 발언을 한 여교수에 대해 피해 여교수에 15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백효민 민사28단독 판사는 부산 모 대학 교수 B 씨가 같은 대학 교수 A(56)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B 씨에게 15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영화관은 유해… 학교 옆 불허”

#대전의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떠오른 동구 가오지구. 이곳 가오중학교 인근에 최근 복합영화관이 들어서려다 중단됐다. 관할 교육청이 “복합영화관은 청소년 유해시설”이라며 막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지구 내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며 복합영화관을 원했지만 교육청은 요지부동이다. 하지만 인근 학원 건물에는 호프집, 전화방, 단란주점 등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는 사장 자리까지 꺾자면서 복미 사업을 총괄해왔다.

백스터 사장의 후임으로는 삼성전자 복미 부총괄을 맡고 있는 엄영훈 부사장이 선임될 전망이다. 엄 부사장은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의 전략마케팅팀장, 구주 총괄을 거쳐 2017년 7월부터 복미 부총괄로 근무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랫동안 삼성전자에 몸담으면서 다양한 성과를 낸 만큼 새로운 도전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개 상임위원으로 의원 3명씩 15명으로 구성돼 비상설로 운영, 운영위원회가 업무를 겸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면 예산·결산 심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날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는 원태경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 타 시·도의회 관계자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뉴스 언어나 문장을 쓸 때 범하는 잘못, 국어학적 오류 등의 사례.

같은 일본식 조사(예: 범죄와의 전쟁, 저마다의 소질) 등 잘못된 문법이 대표적인 예다. 표현 측면에서도 수동태 문장 표현으로 자동사를 피동사로 잘못 쓰거나(예: 일반화되다, 구체화되다) 원래 피동사인 데 피동형을 중첩적으로 쓰거나(예: 보여지다, 쓰여지다) 자동사로 바뀌야 할 타동사를 피동사로 잘못 쓰기도 한다(예: 키워지다[올바른 표현은 ‘자라다’], 식혀진[올바른 표현은 ‘식은’]). 잘못된 어휘 사용과 함께 문장의 기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자주 눈에 띈다. 기사 문장을 읽다 보면 ‘~라는 지적이다’, ‘~라는 입장이다’, ‘~라는 반응이다’, ‘~라는 분석이다’, ‘~라는 전망이다’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는 주어가 없는 엉터리 문장이다. 또 주어 없이 서술어만 있는 문장이나, 반대로 주어는 있는데 서술어가 없는 잘못된 문장도 마구 쓴다. 예를 들어 ‘A 중학교 인근에 최근 장례식장이 들어서려다 중단됐다’는 주어 없이 ‘중단됐다’는 술어만 있는 경우고, ‘이 보고서는 긴축 경제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것

으로 꼽혔다’는 기사는 주어는 있지만 술어가 없는 경우다.

주어와 술어를 갖췄더라도 서로 엇지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은 시민 공청회를 여는 등 충분한 토론을 하자는 주장이다’에서처럼 주어(더불어민주당)와 술어(주장이다)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방송 뉴스에서 ‘맑고 있습니다’, ‘빔발치고 있습니다’, ‘예상되고 있습니다’와 같은 말을 자주 듣는데, 이것 역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나 진행의 의미를 담을 수 없는 동사를 진행형으로 잘못 쓴 경우다. 이외에도 ‘~에 대해’, ‘~에 의해’, ‘~을 위해’와 같은 불필요한 표현이나 행위, 제고, 개최, 시행 등의 어려운 관공서식 용어 모두 잘못 쓰인 국어 문법에 해당한다.

문법·저널리즘 오류 심각

문법적 오류 못지않게 저널리즘 관점에서 범하는 오류는 사실 더 큰 문제다. 기사의 잘못된 표현이나 오류는 대중의 언어 사용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이완수·박재영, 2011), 세상에 대한 그릇된 상(像)을 제공할 수 있다. 한 예로 기자들이 기사 작성 과정에서 자주 쓰는 위기, 파동, 폭탄, 분노, 격노, 감탄, 욕망, 공포, 폭로, 혐오와 같은 표현은 지나치게 과격하고 주관적이며 감정 편향적이어서 올바른 공론장 형성을 해칠 여지가 크다.

취재원의 말을 인용하는 기사 문구에서 사용하는 감정과 주관적 표현도 마찬가지다. 한국 기자들은 인용구 맺음말(술어)에서 습관적으로 ‘~라고 분노했다’, ‘~라고 비난했다’, ‘~라고 강조했다’, ‘~라고 주장했다’, ‘~라고 일축했다’는 식으로 쓰는데, 이는 기자의 감정과 평가가 개입된 주관적 술어방식이다. 뉴스 기사의 일차적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사실을 토대로, 가치 배제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노했다’, ‘비난했다’, ‘주장했다’, ‘일축했다’, ‘희망했다’, ‘한숨지었다’와 같은 표현은 저널리즘 글쓰기 준칙에 맞지 않거나 자제해야 하는 감정 개입 표현이다(이완수·박재영, 2011).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오랜 전통을 지닌 미국 언론의 인용 술어방식은 그런 점에서 시사적이다. 미국 언론은 누구의 말을 인용할 때 반드시 끝말을 ‘말했다(said)’로 쓴다. 미국 기자들이 인용구의 끝말로 said를 쓰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 표현이 다른 어떤 표현보다 더 가치 배제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박재영과 이완수(2007)는 기사의 직접 인용구 다음에 나오는 최종 술어는 원칙적으로 ‘했(있)다’, ‘말했(있)다’, ‘밝혔(있)다’, ‘덧붙였다’ 등 4개만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전형적인 비문이자 엉터리 문장인 무주체 피동체로 쓰는 것도 문제다. 기자들은 문장을 쓸 때 ‘알려졌다’, ‘전해졌다’, ‘관측이다’, ‘전망이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데, 누가 알렸는지, 전했는지, 관측하고 있는지, 전망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소문이나 추정을 마치 사실처럼 보도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기자가 취재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독자들은 기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임의적으로 포함했거나 기자 자신의 주관적 생각을 마치 객관적인 정보처럼 가장한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이완수·박재영, 2011). 뉴스의 객관적 사실성은 무엇보다 인용 주체가 분명하고, 기자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언어를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실현된다.

주관적·감정적 언어 최대한 배제해야

기사 문장에서 사실(fact)과 의견(opinion)을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저널리즘에서 사실과 의견은 모두 공표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사실과 의견이 섞이면 사실의 왜곡과 편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영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찰스 스콧(Charles Scott)은 “사실은 신성하고, 의견은 자유롭다(facts are sacred, opinion is free)”고 했는데, 이는 저널리즘에서 사실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한 말이다.

이에 못지않게 정치적 편향이나 가치판단이 개입된 언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담은 기사 표현도 자제해야 한다. ‘공권력’, ‘민중’, ‘날치기’와 같은 정치 편향적 표현, ‘SKY대’, ‘파출부’, ‘청소부’, ‘매춘부’와 같은 직업과 사회적 지위 편향적 표현, ‘얼짱’, ‘몸짱’, ‘근육질’ 등의 외모 편향적 표현, ‘여기자’, ‘여군’, ‘여교수’, ‘여성 CEO’, ‘미혼모’ 등의 성차별적 표현, ‘동남아 근로자’, ‘조선족’과 같은 인종이나 국적 편향성으로 비치는 표현은 모두 특정 대상이나 집단에 대해 사회적 왜곡과 편향을 불러올 수 있다. ‘문심’, ‘박심’, ‘친노계’, ‘친박계’, ‘북풍’ 등의 무리한 조어나 ‘사상 최악의 물난리’, ‘통신대란’, ‘대반란’, ‘총체적 난국’과 같은 강렬하고 극단적인 표현인 과(過) 어휘도 가치 개입적 표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을 바꿔놓거나, 사상이나 이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Kuo & Nakamura, 2005).

“

뉴스 언어는 세상의 일이나 인물에 대한 의미, 특징, 관점을 보여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좋은 기사 문장은 올바른 표현과 함께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쓰는 것이다. 좋은 문장의 기사만큼 좋은 뉴스도 없다.

언론의 신뢰도 위기는 잘못된 뉴스 문장 쓰기에서 비롯한다. 언론의 신뢰도는 기사가 사실에 기초해 객관적으로 쓰였는지, 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게 공정하게 쓰였는지에 달려 있다.

”

언론이 특정 계층의 생각을 반영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가미하거나, 시청자들에게 과도한 위기감과 의견의 양극화를 조장할 수 있는 용어나 표현은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벗어난 행위다(임태섭, 1999; 황치성, 2008). 기사 표현이 감정적이거나 가치 편향적으로 쓰이는 순간 뉴스의 객관적 사실성은 무너진다.

과도한 표현은 공정성 훼손

뉴스 문장을 사실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가치 배제적으로 쓰기는 물론 쉽지 않다. 기자들은 뉴스 작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개인의 의견, 선호도, 감정, 조직과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를 개입하고, 특정 프레임이나 편향성을 만들어낸다. 하루하루 마감시간에 쫓기는 기자들이 올바른 문장과 객관적 표현을 사용하기는 특히 더 어렵다. 더구나 최근 뉴스의 디지털화로 속보성이 강조되면서 잘못된 기사 문장이 더 많이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교열부 기자들이 표현을 고치고 문장을 다듬는 교열과정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절차마저 사라졌다.

뉴스 언어는 세상의 일이나 인물에 대한 의미, 특징, 관점을 보여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Fowler, 1991). 좋은 기사 문장은 올바른 표현과 함께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쓰는 것이다. 좋은 문장의 기사만큼 좋은 뉴스도 없다.

언론의 신뢰도 위기는 잘못된 뉴스 문장 쓰기에서 비롯한다. 언론 신뢰도는 기사가 사실에 기초해 객관적으로 쓰였는지, 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쓰였는지에 달려 있다. 뉴스가 객관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기자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함은 물론이다. 기자 개인의 의견, 선호도, 감정을 최대한 배제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좋은 뉴스는 사실을 수집해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비편향적으로 재현했는지, 어떤 사안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을 동등하게 반영했는지, 또 언어나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에 따라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들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왜곡되지 않은 언어 사용은 필수다. 기자들은 뉴스의 객관성, 정확성 그리고 공정성과 같은 저널리즘 규범과 원칙이 올바른 뉴스 표현과 문장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